

[가칭]사회서비스원의 벤칭마킹을 위한 일본 사회복지사업단 검토

2018. 10. 15

1 출장 개요

□ 출장목적

- (가칭)사회서비스원의 벤치마킹을 위한 일본 사회복지사업단 검토

□ 과제명

- 수탁 18-093-00 (가칭)사회서비스원 사업운영모델 연구

□ 출장기간

- 2018.9.18.(화)~9.20(목), 2박3일

□ 출장지역

- 일본 오사카, 교토

□ 출장자

- 이철선 연구위원, 김은정 부연구위원, 임정미 부연구위원,
민동세 외부연구진(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)

□ 일정요약

출장일		국가	방문기관	면담자	주요 논의사항, 습득사항
1일차	18.9.18. (화요일)	일본 교토	교토부 사회복지사업단	森本幸治 이사 등 5인	• 도도부 직영 사회복지사업단 사업영역 및 지자체 관계
2일차	18.9.19 (수요일)	일본 교토	교토시 공영보육지도과	守本知樹 과장 등 4인	• 일본 보육사업 시행 체계
	18.9.19 (수요일)	일본 오사카	오사카부 사회복지사업단	日向勇人 과장 등 4인	• 도도부 민영 사회복지사업 단 사업영역 및 지자체 관계
	18.9.19 (수요일)	일본 오사카	일본보육전문가 간담회	일본테츠카야대 신지 이시다 교수	• 일본 보육 현황과 이슈
3일차	18.9.20 (목요일)	귀국	-	-	-

2 세부 내용

가. (개관) 복지부의 (가칭)사회서비스원 설립 시, 벤치마킹 대상으로 고려된 일본사회복지사업단이 벤치마킹대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일본 교투·오사카부 사회복지사업단을 방문

- (검토 내용) 도도부현 직영 대비 민영 사회복지사업단의 운영 상태 비교, 보육사업의 사회복지사업단 진입 가능성, 기타 일본 사회복지사업단의 신사업 모델 등을 파악

1) 도도부현 직영 대비 민영 사회복지사업단의 운영상태 비교

- (배경) 한국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 중이나 일본은 복지예산 증가로 민영화를 추진
 - (검토 기준) 공공성 수준, 종사자 처우 정도, 수익성 제고, 서비스 품질 제고 등 4가지 측면에서 실무자 의견을 청취
- (결과) 공용직영기관은 공공성 확보로 보조금 지원이 많은 반면, 민간민영기관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을 최소화

구분	교토부 사회복지사업단	오사카 사회복지사업단
운영 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광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민영 사회복지법인으로 최근 사업규모를 슬림화 · 직영기관: 공립 사회복지시설 6개 · 지정관리: 기타 사회복지사업은 교토부 위탁을 받아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설민영에서 완전 독립한 민설민영 사회복지법인 · 복지재정 긴축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절감 - 인가시설은 후생노동성·광역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, 인가 외 시설은 사업단 독자 운영
공공성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초지자체: 사업 중복 되지 않도록 조정, 보육은 지자체 담당임으로 사업 미진출 - 광역지자체: 후생노동성 기준에 따라 감사실시, 재정지원 - 후생노동성: 사회복지법인 운영 및 감사기준 만을 제시, 직접 지원기관은 부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성: 대표와 종사자 모두 일반인 - 공설민영 시절은 공공성 확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민설 민영 후 수익성 사업 확보를 위해 사각지대 사업 등은 최소화

구분	교토부 사회복지사업단	오사카 사회복지사업단
	<p>노하우를 지정관리 기관들에게 전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: 민간진출이 어려운 사업(예: 방과 후 장애아동 지원, 시각장애인 요양홈, 농촌산간 등)을 담당 ·민간사업 중 질 낮은 사업이나 신사업을 운영 후, 서비스 운영모델 제시 ·중증노인 등 사각지대 서비스 제공 ·민간이 수익을 얻기 어려운 사업 발굴 ·필요한 경우, 민간시설에 서비스 제공형태 연수 제공 	
종사자 처우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초기 공무원 규정에 의한 연공제 - 지정관리 사업 도입 후, 임금체계가 직무급으로 전환 - 60세 정년보장, 65세까지 퇴직 후 재고용 -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직원 처우개선 보조금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영화 이후 직무급으로 전환하여 종사자 임금수준은 하락 - 커리어 향상 개선 및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
	- 경영수익, 연수 참가,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급여가산	
수익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성 부문 개별사업의 적자 부분을 교토부가 지정관리 위탁비용으로 충당 - 교토부 외 기관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부사업을 하는 곳도 존재 - 종사자 인건비 절감이 수익성 제고 연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단 운영을 위해 개별사업 중 적자 부분은 수익사업의 전출 등 통합회계를 통해 수지보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리비용 절감(사무비용, 급식, 청소, 보수 관리 등은 사무국에서 일괄계약) - 각 시설의 회계를 사무국에서 통합 관리 	
서비스 품질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영이 서비스 질을 담보로 하지 않음으로 서비스 내용과 금액을 차별화시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은 최소기준 인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나, 특별양호 노인홈 등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대체인력제도를 운영

2) 일본 사회복지사업단의 보육사업 진출 여부와 현황

- (배경) 한국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, 보육사업을 추진 중이나, 출장 전 사전조사에서 사회복지사업단의 보육 진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검토
- (결과) 어린이집은 교토시 등 기초자치단체 소관 사업으로,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단은 위탁운영기관으로만 참여 가능

- (광역지자체) 직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집은 부재
- (보육소 운영) 지자체 보조금 + 이용료(부모부담)로 운영
- (보육료 체계) 중앙정부차원에서 동일보육료를 지정하나 정부보조금 수준은 시정촌마다 다름. 보조금 이외 이용료는 소득수준에 따른 부모부담료로 차등 부과

구분 기준	공설직영 어린이집	공설민영 어린이집
운영비중	- 전체 어린이집 중 10% · 시골, 산간 등 사각지대)	- 전체 어린이집 중 90% · 도시 중심
종사자	- 전원 공무원 · 연공제 임금체계 - 지방교부세로 인건비 지원 100%	- 민간인 · 기초지자체에서 지침화한 임금체계는 부재 · 민간 자체적으로 직무급 도입
	-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금 부재	
서비스 품질	-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은 감사로 대체 · 문제발생 시 면허 취소 등	

3) 일본 사회복지사업단의 신사업 탐색

- (배경)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, 통합재가사업 등을 고려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
- (결과) 방문요양, 주간서비스, 단기서비스 등 한국의 통합재가 서비스와 유사한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서비스를 운영
 - (정책적 시사점) 재가장기요양기관 종류에 따라 사업장·비용설계·청구 등이 상이하다는 한계점이 존재
 - (서비스 개발) 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 5대 재가요양 부문을 단기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패키지 개발을 검토

구분	주요 내용
정원 및 시설	- 등록정원(방문요양) 25명, 주간서비스 15명/1일, 단기거주서비스 5명/1일 - 시설: 1인실을 운영하되, 여분 1인 실 등 총 6 호실 운영
운영일	- 연중 무휴, 이용시간 8:45~17:30

구 분	주요 내용
대상	- 미노시 재택보호 대상자, 개호보험인정 등급자
서비스 내용	- 개호보험 1~5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, 단기보호서비스, 주간보호서비스를 통합 제공
서비스 장점	- 갑자기 단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대기하지 않고 사용 가능 - 회원가입 전제로 개호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총액을 청구해 운영에 용이 - 3개 서비스 간 서비스 제공자가 바뀌는 불안제거를 위해 1인이 3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
서비스 단점	- 개호서비스의 일부를 이용시,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등이 부담으로 작용 - 사업시작 10년 후에도 오사카부 미노시의 다기능형사업소는 3개소뿐
서비스 이용료	- 등급에 따라 차별적이지만 회원으로 가입 시, 서비스 종류와 이용횟수에 상관없이 보장된 이용료 전액(개호보험+자기부담)을 사업소가 보장 · 1등급(경증) : 월이용료 55,837엔(보험 50,253엔+본인부담 5,584엔) · 5등급(중증) : 월이용료 343,006엔(보험 308,705엔+본인부담 34,301엔) · 비급여 : 식비 1일 1,340엔, 숙박 1일 2,500엔, 30일 식사숙박시 115,200엔

나. (기대 효과) (가칭)사회서비스원 설립 시, 종사자 처우수준 향상은 예상되나, 공공성 수준 설정에 따라 진출 목표시장의 수준이 결정되는 등 세부사업 시설구축 정책방향이 차별적으로 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정책 구축이 필요

- (종사자 처우 수준) 공영직영기관은 민간모델 수입으로, 민간 민영기관은 정부보조금 단절로 종사자 처우개선은 약화
- (서비스 품질 제고) 거대 사회복지사업단 운영으로 개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서비스 품질에는 긍정적
- (진출시장 결정) (가칭)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수준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진출 지역이 전 기초지자체 또는 사각지대에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
- (수익성 제고) 공공성 수준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 수익 확보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